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추석 특별판

001 **풀리지 않는 참사의 의문점, 확대되어 가는 의혹**

004 **말바꾸고 안면몰수하는 청와대**

005 **세월호 유가족을 비방 왜곡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007 **세월호 특별법이 민생 법안이다!**

008 **"세월호 가족이라 불리게 된 사람들"**

010 **"안돼, 울지마!"**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012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 출발, 세월호 특별법!**

014 [강풀 웹툰] **사람이 있다**

015 **이것이 언론인가** '세월호 특별법' 보도로 드러난 언론의 추한 민낯

풀리지 않는 참사의 의문점, 확대되어 가는 의혹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다섯 달이 지났음에도, 사고 시작부터 수습 단계까지 여전히 많은 의혹들이 남아 있다. 참사 발생 이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 풀리지 않았고, 국정원 실소유주 논란 등 또 다른 의혹들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 기관보고도 진상을 규명하기엔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성역없는 진상조사만이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규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이 갖고 있는 풀리지 않는 의혹들을 정리했다.

1 이해 못할 '대통령 7시간'

사고 당일 오후 5시 15분 경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대책본부에 방문하여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발견하거나 구조하기 힘느냐"는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함으로써 과연 대통령이 청와대와 정부의 보고를 제대로 받았는지에 대한 의혹이 일었다.

그리고 지난 7월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통해,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이 사고 당일 오후 5시15분 대통령이 중앙대책본부를 방문할 때까지 한번도 대면하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지휘해야 할 대통령이 사고 발생 후 7시간 동안 대면보고를 받지 않고, 회의도 주재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모른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 의혹을 부풀렸고,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7시간의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사생활"이라고 주장해 국민을 황당하게 했다. 근무시간에 대통령에게 사생활이 있는가? 그냥 밝히면 되는 문제에 대해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일관하는 청와대의 행태는 더 큰 의혹을 낳았으며, 결국 해외언론까지 이 문제를 대서특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304명의 소중한 국민들이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때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싶다.

2 국정원의 실소유주 논란

2014년 7월 25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이 발견되었다. 2013년 2월 26일 작성하여 27일 최종 수정한 문건에는 '선내 여객구역 작업 예정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자판기 설치, 샤워실 누수용접, CCTV 추가 신설작업, 환풍기 채색, 직원들의 휴가 계획, 수당보고서 작성 등 100여 건의 작업내용과 작업자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누가 봐도 배의 주인이 배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문건이었는데, 그 제목이 '국정원 지적사항'으로 돼 있었던 것이다.

의혹이 일자 국정원은 국토해양부 요청으로 세월호의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해 '보안측정'을 실시하였으며 100여개 지적사항 중에서 5개만이 국정원에서 지시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100개 중 5개만 국정원 지적사항인데 왜 제목이 '국정원 지적사항'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8월 중순 청해진해운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공판에서 출항초기에 국정원 직원이 세월호에 탑승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 지적사항' 이라는 문건이나 천 톤 이상 선박 중 세월호만 굳이 국정원에 보고토록 체계가 있는 것을 보면 소유관계 비슷한 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국정원이 개입할 수는 없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 서면보고 받음
10:00

17:00 대통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던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이상의 내용들은 당연히 국정원이 세월호의 주인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하며, 이후 세월호의 증개축, 출항 당일 상황에 국정원이 어떻게 개입했는가라는 추가적인 의혹을 낳는다.

3 CCTV 왜 갑자기 꺼졌는가?

세월호 침몰 직전 당시 배의 상황을 보여주는 CCTV가 지난 8월 22일, 광주지방 법원에서 가족들에게 공개됐다. 세월호에는 64개 CCTV가 있고 이 영상을 DVR 메모리 장치에 저장해왔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었다. 침몰 시작 전 평온한 상황에서 CCTV가 갑자기 꺼진 것이다. 정전에 의한 것이었다면 CCTV와 DVR 장치가 모두 동시에 꺼졌어야 하는데 CCTV는 8시30분59초에 꺼졌고 DVR 장치는 8시33분38초에 꺼졌다. 더군다나 생존 학생들 증언에 의하면 정전은 없었다고 한다. 합동수사본부의 조사 결과 세월호는 8시49분에 침몰을 시작했는데 왜 사고 이전 시점에 CCTV가 꺼졌을까? 중요장비인 CCTV나 DVR 전원 장치에 일반 승객이 접근이 어렵다는 점에서 세월호 선원들이 사고를 사전에 인지하고 CCTV를 껐을 가능성이 있다. 밝혀야 할 의혹이다.

선수로 접근하여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부터 구조하는 해경의 모습

4 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을까?

2014년 7월 2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해경은 목포해경 123정이 세월호에 접근하자마자 선수로 가서 선원들부터 구조하였다는 질의에 대해서 "선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었다. 광주에서 진행되는 재판에서 선원들은 자신이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원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 없었으며, 자신이 선원임을 밝혔다는 진술을 했다. 해경은 선원을 먼저 구조했지만 어선과 어업 지도선은 처음부터 선미로 접근하여 일반 승객을 구조했다.

진도 VTS 센터는 오전 9시 7분에서 37분까지 30분간 세월호와 VHF 선박무선통신을 이용해 단독으로 교신하여, 여객선실 승객이 퇴선하지 못한 선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승객들에게 탈출지시를 하지 않았고, 해경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선내에 진입하여 승객을 구조하지 않았다. 구조하지 않은 것인지, 못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이다.

이외에도 사고 시작부터 수습 단계까지 여전히 많은 의혹들이 남아있다. 해경과 언딘과의 관계, 사고 초기 실제 구조작업에 투입된 잠수사의 숫자, 장시간 구난 작전을 할 수 있는 통영함은 왜 투입을 못했는지, 해경은 왜 피의자 신분인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을 해경직원의 아파트와 모텔에서 재우며 특별관리를 했는지, 사고 전날 세월호가 군산 앞 바다에서 심하게 기울었다는 증언은 무엇을 말하는지, 사고해역에서 급격한 변침의 이유는 무엇인지, VTS 교신기록은 왜 편집되었는지 등 풀리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으며, 또한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 풀어야 할 의혹은 많고 참사의 진상규명은 멀기만 하다.

세월호 특별법 논란 간추림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세월호특별법이 왜 제기됐고, 쟁점은 무엇인지,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의 요구는 무엇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을 간추려 정리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라는 문제에 한정해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 특별법에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구성을 위한 대안마련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유가족들과 대다수 국민들은 특별법 제정 없이 기존의 검찰 수사로 '성역없는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와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소환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과 세월호와 국정원 관계 등 핵심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족과 국민들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와 여당에서 독립한 제3의 기구가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역할

특별법이 제정되면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바로 이런 독립적인 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여야의 지난 8월 19일 2차 합의를 통해 여야가 각각 5명씩,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각각 2명씩, 그리고 유가족 대표가 3명씩 추천해서 총 17명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국민 대다수는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그래야 성역 없는 조사,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올바른 처방을 낳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진상규명에 강한의지를 가진 특검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지 못한다면, 적어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될 특별검사가 여당과 청와대 입장이 반영된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대한변협회장, 그리고 국회추천 4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되고 이들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되어 있다.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차장은 국가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영향 아래 있으므로, 국회 추천 4인은 모두 야당이나 세월호 유가족이 추천해야만 청와대와 여당에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인사가 특검 후보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여당은 이렇게 되면 상설특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가 기존의 틀을 뛰어넘기 위함이 아닌가? 국민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인 서강대 이호중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설특검법은 특검에 관한 일반법이고, 여기에 예외를 만드는 것이 특별법이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상규명에 필요한 최대한의 법을 만들자'고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 연결, 특검 기간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간의 유기적 연결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도 중요한 변수다. 진상조사위의 조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특검이 세부적 수사와 기소권을 행사해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사권의 행사기간이 충분히 보장되느냐도 중요한 쟁점이다. 지난 8월 19일 여야 합의안에서는 특검이 준비기간을 제외하고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고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180여 동안만 수사 할 수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복잡성과 여러 의혹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충분한 수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특검 기간을 보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말바꾸고 안면몰수하는 청와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전 국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던 박근혜 대통령. 그러나 단식 37일 째에 청와대 면담을 요구하던 김영오씨(故김유민양 부친)의 요청에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8월 22일에 김영오씨가 단식을 중단하자 대통령은 즉시 부산 자갈치 시장에 민생탐방을 가며 세월호 정국 전환을 꾀하고 있다. 6.4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외면하는 기조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이다. 그래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눈물로 '특별법' 말하던 대통령, 이제와서 "대통령 나설 일 아니다"

4월 17일 — **진도 체육관 방문**

"만약에 오늘 한 이야기가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5월 16일 — **청와대에서 유가족 면담**

"유가족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언제든 찾아오시라"
"유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4월 16일 이후 세월호 이전 대한민국과 그 후의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 19일 — **대통령 대국민담화**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것도 제안합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김영오씨를 비롯한 유가족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하며 단식 돌입 — **7월 14일**

8월 14일 — **대통령-교황 만남**

"세월호 침몰 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

8월 19일 — **대통령, 새누리당 중앙위원 600명 초청연찬 개최**

단식 37일째, 김영오씨 대통령 면담 공식 요청

8월 21일 — **청와대,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 나설 일 아니다' 면담 거절**

"세월호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로 대통령이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8월 22일 — **대통령, 자갈치 시장 방문으로 세월호 정국 전환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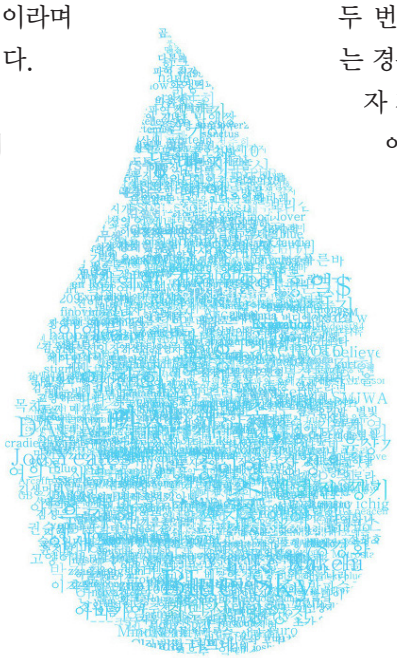
단식 40일째, 김영오씨 건강악화로 병원행

8월 27일 — **대통령, 뮤지컬 관람**

세월호 유가족을 비방 왜곡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세월호 참사 이후 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각종 유언비어와 악성댓글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다. 얼마 전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한 '일간베스트' 이용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국회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유포시켰다는 카톡이나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들었다는 대외비 문건이 여러 경로로 확산되면서 세월호 가족들의 특별법 제정 촉구의 진정성에 대한 왜곡이 계속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등은 세월호 참사를 조류독감과 교통사고 등에 비교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유가족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특례입학과 특혜를 요구했다고 비방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가족들의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 특혜법이라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46일간 단식한 김영오씨(유민 아빠)에 대한 각종 비방과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개인사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의 글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으며, 이러한 악성 루머와 유언비어를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유포시키는 것이 아닌가는 의혹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채널 A와 TV조선 등과 같은 종편사들은 이러한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결국 목숨을 걸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김영오씨를 비난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되돌려 보겠다는 악의적인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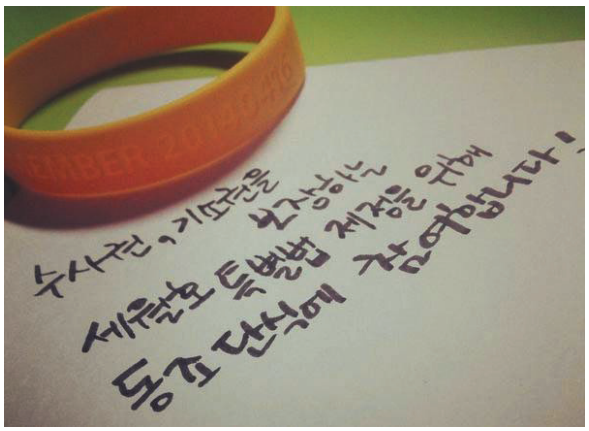
세월호 유가족을 비방하는 유형 첫 번째는 단순한 모욕성 비방이다. 유가족을 유족충이라고 표현한다거나 벼슬아치랑 세월호를 합쳐서 세슬아치라는 말을 만들기도 있고 자식을 팔아서 시체장사를 한다는 말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악성 댓글들을 보며 세월호 가족들의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공식 법률대리인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약 70여건의 고소고발을 진행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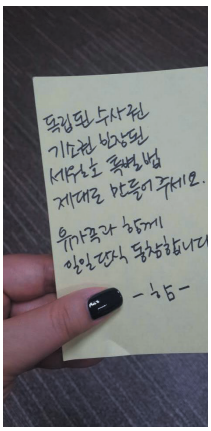
두 번째 유형은 엉뚱한 근거를 제시하며 비방하는 경우인데 세월호 가족들이 특별법에서 의사상자 지정과 특례입학을 요구했다는 주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누차 강조했듯이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대한변협,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제출한 특별법안에는 의사상자 지정과 특례입학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공식 입장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www.sewolho416.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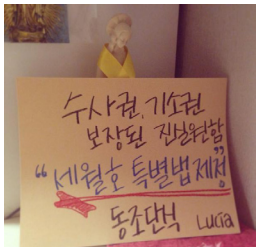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함께 세월호 피해자와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유언비어와 악성댓글 제보를 받는 메일 계정(sewolreport@gmail.com)을 개설하고 지속적인 제보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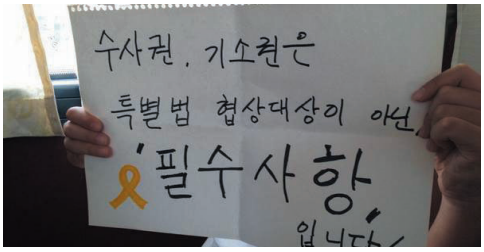
세월호 특별법 국민단식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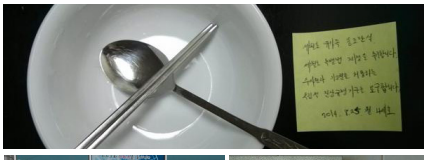
특별법을 향한 배고픔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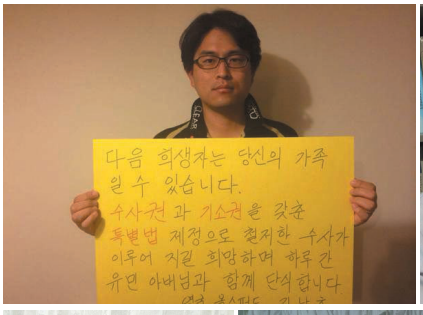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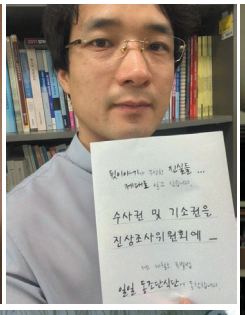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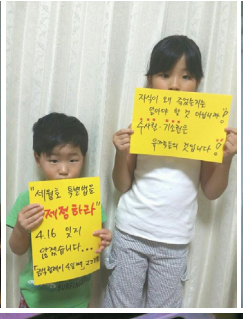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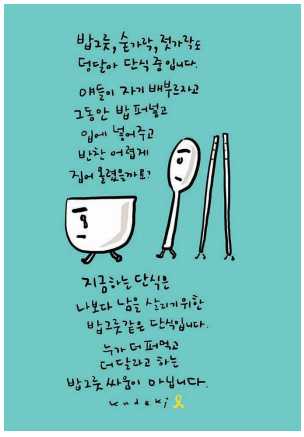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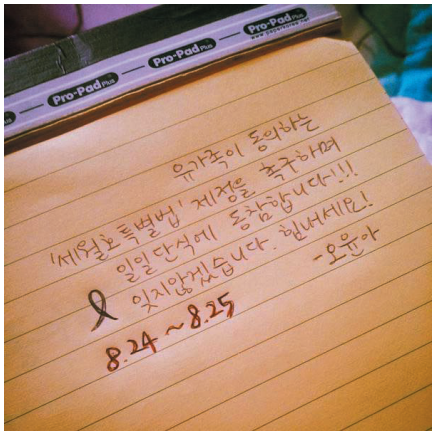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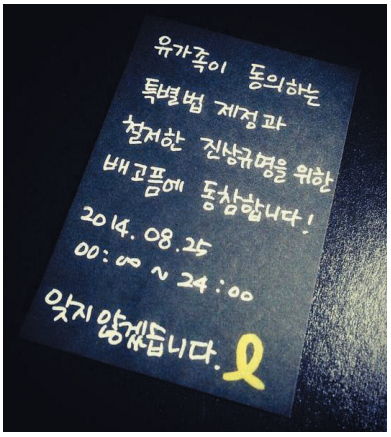












세월호 특별법이 민생 법안이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관계 장관 5명과 함께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는 호소문에서 "경제가 위기인데, 세월호 문제 때문에 경제를 살릴 민생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세월호 특별법과 30개의 소위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를 압박했다.

"경제 어려우니 진상규명 포기하라"는 협박

현재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국회 공전은 유족들이 요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청와대와 여당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법안 통과 연계'를 통해 정부와 여당에 맞서는 것은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기 위한 야당과 국민의 정당방위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최경환 경제팀이 '분리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 공전의 책임이 야당과 유족에게 있음을 일방적으로 전제하고,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무장해제하라는 부당한 요구다. 야당이 여당의 요구에 순응해 분리처리에 동의한다면, 야당은 저항 수단을 상실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진정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싶다면, 야당과 국민을 협박할 게 아니라 청와대에 가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제대로 된 특별법을 수용하라고 건의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이 '민생 악법' 통과 막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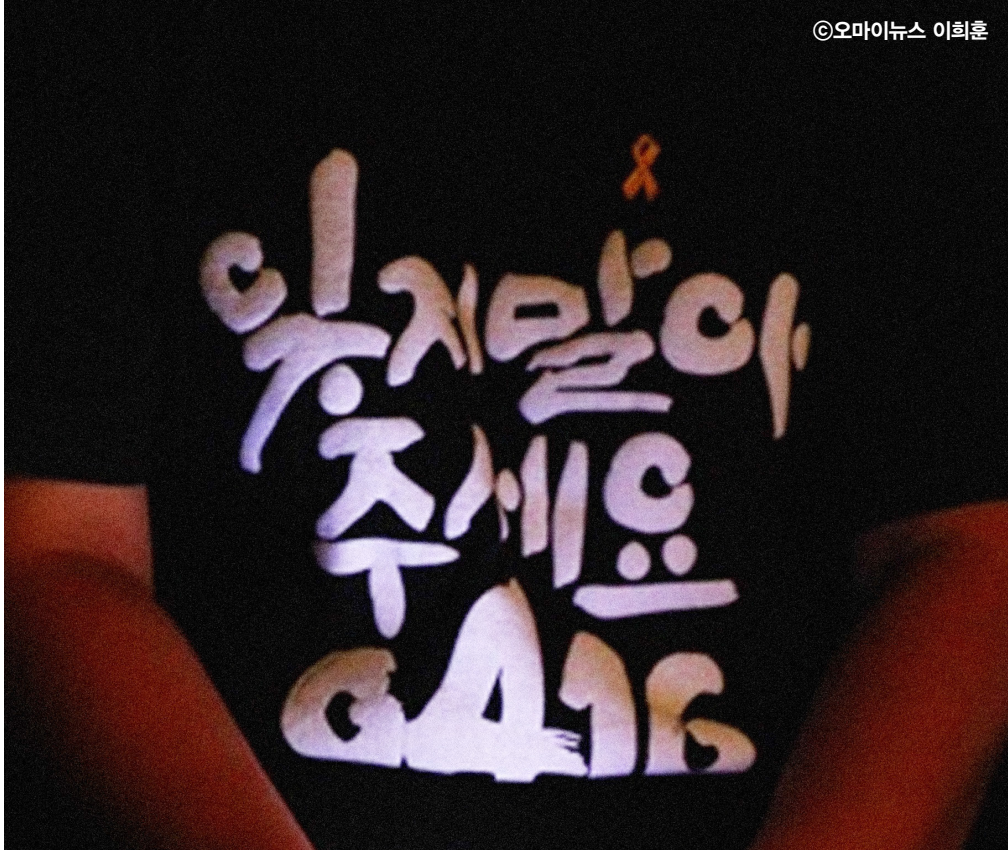
그가 말하는 소위 '민생법안'은 어떤 것들인가? 신임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주되게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 부양 관련 법안들과 메디텔 규제완화와 원격의료 허용 등의 의료영리화, 재벌들의 민원수리를 위한 서비스규제완화 법안들이다. 이러한 법들은 부동산 거품을 지탱해 부동산 부자들의 손실을 막고, 의료를 영리화해 대형병원의 배를 불리며, 학교 앞에 호텔을 만들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경제자유구역과 크루즈선 등에 카지노를 만들어 국민들의 돈을 쥐어짜서 관련 재벌들의 배를 불리는, '민생 법안'이 아니라 '양극화 확대 법안'이며, '민생 악법'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세월호 문제로 인해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문제가 민생 악법의 날치기를 막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세월호 특별법이 민생 법안이다!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 기업들이 투자를 안한다고 하고, 기업들은 투자할 곳이 없다고 한다. 과연 그러한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안전'을 위한 대대적 투자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세월호 특별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이에 기반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진다면, 이는 정부와 기업들에게 국민 안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강제할 것이며, 이는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재해 구조 시스템 강화와 훈련을 위해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이고, 과적을 막기 위해 화물차와 화물선, 화물기 투자가 강제될 것이고, 무책임을 양산하는 비정규직이 줄어들 것이고, 위험한 1인 승무를 막기 위해 추가로 기관사들이 고용될 것이고, 항만과 공항 곳곳, 각종 공사장에 안전 관련 투자가 늘어나고 안전관련 감독원들이 새로 고용될 것이고, 사회 전반적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세월호 특별법이야말로 '국민 안전'과 '투자 확대'를 동시에 잡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진정한 내수 활성화 방안이자 '민생 법안'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부가 말로만 하는 '국가 대개조'가 아니겠는가?



©오마이뉴스 이희훈

세월호 가족이라 불리게 된 사람들

꼭 살아있는 것만 같다

"지구 종말까지 씨가 말라버렸다"고 말했다. 영석이는 외아들이다. 아빠는 광화문, 엄마는 청운동사무소 앞에 있다. 4월 16일 이후 제대로 못 잤다. 어젯밤도 꼬박 새고 다른 유가족들 챙기느라 종종거린다. 그런데 그날 이후 집에는 커피물 끓이는 거 말고 가스렌지 한번 켜보지 않았다. 어느날 애써 잠들었다 싶었는데 눈 뜨니 비 오는 바깥이었다. "몽유병도 생겼어요. 미쳤어. 내가." 먹으면 배 아래에서 이틀 동안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는다. 그건 웅기엄마도 마찬가지다. 하루 한 끼만 먹는다. 서로 얘기 주고 받다보면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 "너무 많이 울고, 크게 울면 애들이 좋은데 못 간다고 울지 말라더라고…제대로 못 울어서 그런가 봐요." 수현아빠도 잘 운다. 어느날 술 먹고 들어와 아파트 창문 열고 악쓰며 울었다. 조용한 아파트, 누가 새벽에 시끄럽게 구냐면서 욕을 한다. 그러자 저 밑 누군가 "울만하니 우니까 놔 두십시다"라고 대꾸하더란다. 이웃이었다. 수현엄마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그 이웃이 전화 왔다. 수현아빠가 아까부터 놀이터에서 울더라 말해줬다. 경주엄마는 염 한, 꽁꽁 싸인 경주를 보았다. 이상했다. 낯설었다. 아이를 만졌더니 꽁꽁 얼어 있었다. 그때부터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나와 있던 사진들도 모두 앨범에 넣었다. 사진보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데 경주 목소리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다. 경주 얼굴 그림만 집에 걸어 두었다. 그건 그래도 볼 수 있다. 청와대 앞으로 대통령 만나자며 왔던 지난번, 사지 들려 멍투성이가 되었다. 경찰은 경주엄마 눈을 번듯이 쳐다보며 가슴을 가격하고 팔꿈치로 코를 때렸다. 소식 듣고 놀란 경주 중학교 친구들이 "엄마 힘내라"며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경주사진. 울지 않으려 했는데 병원 응급실에서 급기야 눈물이 터졌다. "꼭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시간은 모질게 흘러 간다

바다에서 올라온 건호얼굴은 보랏빛이었다. 다른 가족들이 건호엄마 힘들어 하니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봤다. 보랏빛 얼굴도 예쁘기만 했다. 수빈엄마에게도 돌아온 수빈이는 살아있는 아이였다. 만져 보려 하니 의료진이 손을 쳤다. "왜 내 딸 못 만지게 하냐" 했더니 피부 벗겨질까 그렇다

고 한다. 얼굴 한번 못 만진 수빈엄마는 이야기할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난다. 예지엄마 휴대전화에는 유치원 발표회 동영상이 있다. 여러 아이들 틈에 가장 리듬감 좋은 아이 하나가 눈에 띈다. "얘가 예지예요. 봐봐, 이렇게 엉덩이를 잘 흔들지. 그런데 얘도 죽고 얘도 죽고 얘도 죽었어요. 이중에 우리 예지하고 4명이 다 죽었어요. 같은 유치원 나오고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단원고 다녔던 아이들…" 엉덩이 살랑 살랑 흔드는 아이들 옛 사진 사이에서 슬픔이 흐른다. 숨 쉬는 것이 모두 그리움이거나 아픔인 사람들. 그들에게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세월호 가족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참사 이후 알던 관계는 모두 끊어졌다. 그들과 나누었던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는 나눌 수 없다. 내내 진도 다니고, 재판 다니고, 서명 받으러 전국 방방곡곡 다니지 않은데 없었다. 청와대로, KBS로, 국회, 광화문으로 한댓 잠도 무수히 잤다. 그러는 동안 "미안하다" "잊지 않을께" 약속 하던 국민들 중 많은 이들은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 버럭 성을 낸다. 알던 사람들도 다르지 않다. 끔찍한 이름 '세월호' 가족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가족이 생겼다. 내 마음 가장 잘 아는 가족들, 자식을 같이 잃은 사람들… 그들 곁에서 자원봉사해준 사람들, 서명운동 나서주고 1인 시위하고 내일처럼 눈물 흘려준 사람들이 남았다. "우리 애들이 선물 줬어. 우리한테…세상 알게 해주고 고마운 사람들 많다는 것 알게 해주고. 이게 다 선물이지." 그래도 선물 안 받고 내 새끼 얼굴 만져보고, 내 새끼 한번 안아주고 싶어서 매일 꿈이라도 꾸고 싶은 사람들, 그들 이름은 세월호 가족이다. 물속에 갇혀 있던 아이들은 잠수사가 "애들아 올라가자, 엄마한테 가자" 하면 거짓말처럼 물 위로 올라왔다. 앞으로 살아 내야 할 솜털처럼 섬세한 시간들을 다 못살아내서 그랬을까, 엄마 보러 가자는 말에 어쩌면 그렇게 가볍게 잠수사 손을 따라 올라왔을까. 그런 이들을 보낸 부모들에게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시간은 얼마나 무거운 시간일까. 무수한 사연 하나 하나가 끝나지 않은 참사로 침몰해야만 하는 것일까, 대한민국은 숨 막히는 맹골수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아름다운 약속

"그래요. 세월호 특별법 만들지 마세요. 대신 내 새끼 살려내세요. 그럼 됩니다. 그런데요. 그거 못하잖아요? 우리 재욱이 살릴 수 없잖아요? 그럼 특별법 만드세요. 특별법은 만들 수 있잖아요? 뭐가 무서워 못합니까?" 재욱엄마는 20년 간호사 생활 접고 꿈이 있었다. 제대로 역사 공부하고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었다. 여생 보람되게 사는 포부고 소임이었다. 그런데 재욱이가 덜컥 사라졌다. 가장 소중한 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왜 살아야하는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살아야할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잃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재욱엄마 말대로 사람은 살릴 수 없어도 특별법은 만들 수 있다. 안전한 나라 만들 수 있다. 또 다른 세월호, 성수대교, 대구지하철, 삼풍백화점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아직 진행 중인 참사, 10명의 실종자는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진상규명을 위한 첫 단추는 제대로 끼우지도 못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치권은 양보를 얘기한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잃었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더 양보할 수 있는가.

그러나 언젠가 참사는 두터운 백서로 결론을 맺게 된다. 미완이든, 완성이든. 하지만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남을 것이다. 모두가 잊어도 남겨질 사람들, 온전히 아픔을 안고 살아야할 세월호 가족이 남을 것이다. 그들이 비통함으로 마음이 깨져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도 진실을 찾기 위해 초인적인 인내로 버텨온 그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마음이 큰 만큼 상처가 크다. 그들의 힘은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잃었기에 나왔던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채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니, 괜찮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 분들이 앉은 슬픔의 벤치에 함께 앉아 슬퍼하라" 31년 전 아들을 잃은 월토스토프 박사의 말이다. 우리는 세월호 가족들이 겪는 아픔의 벤치에 같이 앉았다. 그리고 비통한 자들이 시작하는 치유와 위로의 시간은 얼마나 위대할 지를 경험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더 아름다운 사회, 4월 16일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뗀 발걸음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 길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세월호 가족이다.

“안돼, 울지마!”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매주 금요일, 팽목항을 향하는 기다림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버스가 처음 운행될 때 16명이던 실종자는 현재 10명으로 줄었지만, 42일째 10명에 머물러 있다. 기다림의 버스를 준비하기 위해 처음 진도에 내려갔을 때가 생각난다. 그날은 흐렸다. 비가 계속 내리다 그쳤다 했다. 창밖은 희뿌연 안개 때문에 하늘과 바다가 잘 구분이 되지 않았다. 때늦은 점심은 2km를 남겨둔 휴게소를 지나치며, ‘비 안 오는 휴게소’에서 먹기로 했다. 다음 휴게소까지는 24km. “거긴 비 안 올지도 모르잖아.” 함께 간 카스, 미류와 하하 웃었다. 그러다 문득, 가족대책위 유경근(예은 아버지) 대변인이 어느 미사에선가 하신 이야기가 떠올랐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전원 구조되었다는 속보만 믿으며, 안산에서 진도까지 5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를 3시간 만에 도착했었다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길었을지 상상할 수도 없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영원하고 긴 시간, 그만큼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것임은 분명했다. ‘진도’, ‘팽목’. 표지판이 보이고도 1시간여를 더 달려야 비로소 도착할 수 있었다.

뿌연 안개 속으로 천막들이 죽 늘어서 있었다. 무료 급식소, 휴대폰 충전소, 해경, 경찰 수색본부, 종교관련 천막들과 가족이 머무는 곳, 모두 지나치게 고요하고 한적했다. 불교에서 달아 놓은 종소리만 바람에 흔들려 소리를 내고 있었다. 진도 체육관도 마찬가지였다. 언론을 통해 접했던, 한 때는 1,000명 이상 북적이던 체육관에는 몇몇 가족들이 섬처럼 떨어져 지내고 있었다. 체육관 밖, 식당 천막으로 나와 진도에서 함께해 주실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 날 이후 체육관에는 한 달 반이 지났을 무렵 다시 올 수 있었다.

기다림의 버스는 체육관에 가지 않았다. 또 다른 부담으로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팽목항에 모여 각자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자정이 되면 실종자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자, 만나자고 하면 언제라도 그 손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7월 23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 전국 각지에서 기다림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 모인 버스 탑승자들은 그렇게 진도 체육관에 모일 수 있었다.

100일 이후부터는 진도 체육관으로 가서 가족들과 조금씩 이야기도 나누고, 노란 리본, 티셔츠, 바람개비 등 마음을 담은 작은 것들을 준비해 전달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광주전남

단체들이 준비하여 기다림과 위로의 하루 '팽목항에서 띄우는 편지' 행사를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준비해 간 416개의 풍등을 두 번에 걸쳐서 실종자들이 있는 바다로 날려 보냈다. 만나자마자 소주 한 잔 가득 따라 주시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가족 분과 함께 날린 풍등은 위태위태 떨어질 듯 했지만 무사히 잘 날아갔다. 그렇게 하면 꼭 아직 돌아오지 못한 내 가족이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기뻐하셨다. 한켠으로 풍등을 날리던 반대편 난간을 잡고 엉엉 울던 가족들의 모습도 아프게 박혀있다.

실은 가족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 두려움의 근원은 내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섣불리 가늠조차 잘 되지 않는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할 수 있는 건 언제까지고 함께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때, 나도 옆에 서서 기다리겠다는 다짐뿐이었다. 몇 번째 순서였는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한빛고등학교 학생들이 나와 노래를 불렀다. 첫 노래는 한영애의 조율이었다. 노랫소리가 귓가에 들리다가 말다가 했다. 그러다 요즘 더욱 많이 듣게 되어 익숙한 전주가 흘러나왔다. "난 난 꿈이 있어요. 버려지고 찢겨.." 솔로를 맡은 학생이 눈물이 터져 노래를 이어 부르지 못했다. 그 순간 옆에 앉은 실종자 가족 분이 "안돼, 울지마!" 하고 작게 외쳤다. 그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태산 같은 울림이었다. 그리고 옆에 앉은 다른 가족과 부둥켜 안고, 노래가 끝날 때까지 펑펑 우셨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잊지 않겠다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되뇌이던 나를 떠올려본다. 잊지 않으려 안간힘 쓰면서 마음속 차곡차곡 쌓아둔 순간들을 꺼내보았다. 그 곳에 이날 내가 본 눈물들을 가장 위에 올려두었다. 속절없이 무너지려고 할 때, 눈물만 흘리고 싶어질 때 그 천둥 같던 외침을 제일 먼저 듣기 위해서.

아직 10명의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팽목항은 하루하루 더해지는 간절한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다. 오는 9월, 예년보다 빨리 왔다는 추석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첫 명절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림의 버스는 팽목항을 향할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사랑의 변신 '변신 이야기'로 받아들였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습을 바꾸어 우리 옆에 있다고 말이야. 그 변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겠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아주 슬픈 사람들에게는 의무가 있을거야. 우리들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남겨놓은 것 중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영원히 삶 속에서 기억하는 거지.(정혜윤, 마술라디오)

우리는 팽목항이 더 이상 슬픔과 절망이 어린 곳이 아니라 다시 삶을 말하는 곳으로 변화할 때까지 오랜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분들, 어서 기다림 버스에 타시라!

곽경훈사진©(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 출발, 세월호 특별법!

'가만히 있으라' 는 말을 믿고 기다렸을 그 304명의 생명이 스러지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지켜봐야했던 우리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그토록 무능하다는 데에 절망했다. 바로 뒤를 이어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가 나고 고양버스터미널에서도 사고가 나서 또다시 많은 이들이 안타깝게 죽어갔다. 서울지하철에서는 큰 추돌사고가 날 뻔했으나 기관사의 노력으로 간신히 큰 사고를 모면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사고소식에 우리는 몸서리친다. 두렵다.

참사는 반복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정부는 이미 진단을 내렸다. 기업들이 돈을 더 벌려고 안전을 무시했고, 정부 관료들이 기업과 결탁하여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맞다.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 사회는 위험과 죽음이 도사리는 곳이 되었다. 서해훼리호 사건에서도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도,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대구지하철에서 화재가 났을 때도, 씨랜드와 태안의 해병대 캠프에서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도 모두가 똑같은 진단을 했지만 이 사회는 결코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다.

청해진해운은 돈을 더 벌기 위해 세월호에 과적을 했고, 국회의원들은 한국선주협회 등의 정치후원금을 받고, 선령을 늘려주고 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을 만들었다. 해경은 언딘과 결탁하여 구조업무를 위탁했다. 검찰은 말단 공무원과 선원들에게만 죄를 물을 뿐, 생명구조에 책임이 있는 정부 최고책임자들, 규제를 완화해준 정치인들은 그 누구도 처벌되지 않았다. '적폐' 를 뿌리뽑고 '관피아' 를 척결하겠다고 외친 정부는 여전히 낙하산 인사를 하고, '경제살리기' 라는 이름으로 안전 규제를 완화한다. 세월호 참사에 조금씩이라도 연루되어 있는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기를 쓰고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한다.

세월호 특별법의 안전사회 건설 대안

유가족이 제안한 특별법에는 안전사회를 위한 대안이 담겨 있다. 특별위원회 안에 '안전사회소위원회' 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안전사회소위원회' 는 과거 재난사고에 대한 원인규명과 향후 대책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방안, 위험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발언하고 위험작업을 멈출 권리 등을 이야기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안전부서와 재난 방지 시스템과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을 하도록 연구하고 독려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고 말하면서 '행정안전부' 를 '안전행정부' 로 바꾸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해경은 구조장비도 없고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경찰은 경찰 차벽을 동원해서 진실을 규명하라는 목소리를 철통같이 가로막았다. 구조에 무능했던 경찰의 모습과 대조적이다. 게다가 국정원은 단식 40일이 넘는 故김유민 아버지 김영오님의 가족과 주치의까지 사찰했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안전' 은 시민들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안전이 아니라 숨죽이고 침묵하도록 만드는 안전이었던 것이다. 심지어 8월 26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안전' 을 산업으로 만들어서 일자리를 늘리자고 이야기한다. 정부의 의무여야 할 시민들의 생명과 존엄마저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1

2

3

1 1953년 창경호 침몰
300여 명 사망, 8명 생존

2 1970년 남영호 침몰
326명 사망, 12명 생존

3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292명 사망, 70명 생존

안전은 시민들이 알고 참여할 때 지켜진다

정부가 통제하고 억압하면 생명의 존엄과 안전은 오히려 위험해진다.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304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안전산업을 발전시키면 돈 있는 자만 안전해지고, 정부는 안전의 의무를 게을리하게 된다. 생명의 존엄과 안전은 모든 시민들의 권리이며, 기업과 정부는 안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참사가 벌어지면 안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과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알권리이다. 불산누출 기업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기업비밀'이라면서 위험 정보를 감춘다. 폭우로 인해 고리원전 2호기가 멈추었는데도 원인 규명 없이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이야기한다. 철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KTX 차량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밝혔는데도 철도공사는 무조건 '안심하라' 고만 이야기한다. 시민들은 우리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래야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생긴다. 또한 시민들은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기업에게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라고 요구하고, 정부 정책이 안전규제를 위반하거나 완화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재난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신속하게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해야 한다. 자발적인 '시민안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사회의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고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안전사회를 위해 시민들의 실천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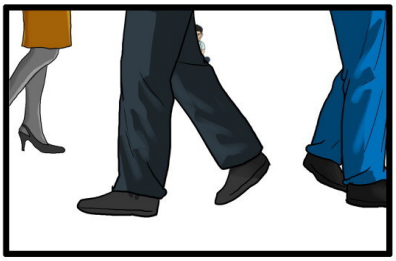
국민과 유족분들은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한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책임자를 밝혀내고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특별법이 만들어져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 원인을 제공한 이들이 지금도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힘이 살아있어야만, 특별위원회도 제한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다. 그렇게 끈질기게 진실을 규명하는 힘은 바로 시민들의 참여와 함께하는 의지로부터 나온다.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안전사회소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때부터 저절로 안전한 사회가 되지는 않는다.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회에서는 안전을 비용으로 환원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관행처럼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변의 위험요소를 바꾸는 '운동'을 할 때 안전사회소위원회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동네에 어떤 위험물질을 다루는 시설이 있는지 알권리 조례제정 운동에 함께하자. 서울지하철을 비롯한 지역지하철에서도 정비업무를 직영으로 만들거나, 승무원들이 반드시 두 명이상 타도록 규정을 바꾸도록 해보자. 수명이 끝난 핵발전소를 이제는 멈추자고 이야기하자. 이런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만 생명의 존엄과 안전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사람이 있다.

-강풀-

사람들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기억을 잊기 마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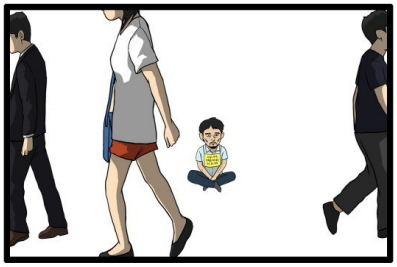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간은 기억을 옅게 하고 끝내는 잊혀지게도 합니다.

잊지 않으려고 해도 잊혀지기도 합니다.

사느라 바빠서 그렇지요.
저마다 나의 바쁜 일상에 치어 그렇지요.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면
때로는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생각하자니 너무 마음 아파서 그렇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기억을 잊기 마련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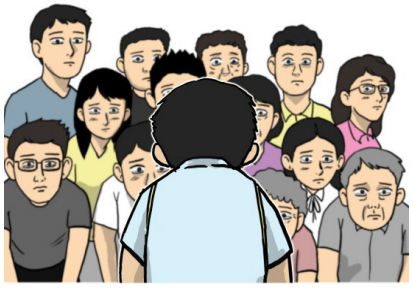
하지만
여기에 기억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유민이 아빠입니다.

유민이 아빠는 벌써 한 달 넘게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이 아빠는 딸을 잊지 못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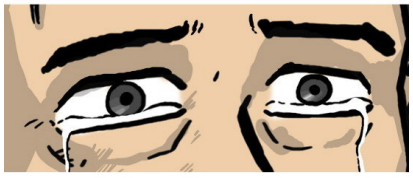
시간을 붙잡기 위해
기억을 붙잡기 위해
한 달 넘게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만 돌아봐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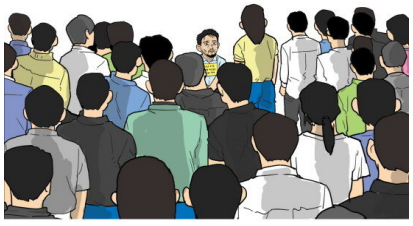


유민이 아빠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돌아봐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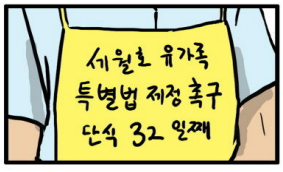
함께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말해주세요.



거기 사람이 있었고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론인가

'세월호 특별법' 보도로 드러난 언론의 추한 민낯

언론은 힘 '만' 세다

언론은 힘이 세다. 힘이 센 만큼 무엇이든 정직하고 공정하게 보도한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 관련 보도를 통해 일부 언론이 보여준 저질스러운 행태는 언론을 신뢰해 온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배신감을 안겨 줬다. 왜곡·편파 보도로 얼룩진 언론의 추악한 민낯을 지금부터 살펴보자.

막말들의 행진, 감싸거나 모른 척하는 언론들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퍼부은 막말은 가히 '언어폭력' 수준이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의 "AI가 발생했을 때도 대통령에 책임을 묻느냐", 심재철 의원이 당직자와 지인들에게 '카톡 문자'로 보냈다는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 주호영 의원과 홍문종 의원의 "세월호 참사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20일이 넘게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유가족들을 향한 김태흠 의원의 "어디 뭐 노숙자들 있는 그런……", 단식 중인 유가족들을 향한 안홍준 의원의 "단식은 죽을 각오로 해야 해. 병원에 실려 가도록"…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이 모든 막말들은 〈한겨레〉와 〈경향〉, JTBC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신문사와 방송사도 제대로 보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보도했다고 해도 단순한 '해프닝'처럼 언급하거나 막말 자체를 옹호하는 데 그쳤다. 특히 심채철 의원의 '카톡 문자'를 있는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 '광고'까지 한 MBC 보도는 압권이었다.

'강경파'와 '외부세력' 탓에 특별법 협상이 제자리라는 언론들

지난 8월 7일,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1차 합의안을 발표했지만 유가족들이 요구한 '기소권과 수사권이 부여된 진상조사위원회'는 합의안에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유가족들과 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조중동은 껍데기뿐인 특별법 합의안을 두 손 들고 반기며, 재협상을 외치는 야당 의원들을 '강경파'로 몰았고 8월 11일 재협상이 결정되고 나자 입을 모아 '강경파에 휘둘린 야당 때문에 합의안이 파기됐다'고 아우성을 쳤다.

7월 2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갈무리

'공영방송' MBC도 문제가 심각했다. MBC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아예 '강경파'와 '온건파'로 구분해 부르며 합의안 파기의 원인을 '강경파의 주도권 장악'으로 못 박았다. 종편 TV조선과 채널A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유가족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한 채 오로지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계파 갈등'으로 인해 합의안이 뒤집어졌다고 보도했다.

'여당 내 강경파'와 함께 '외부세력' 또한 특별법 합의안 파기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조선〉와 〈동아〉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지금껏 함께해 온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을 '광우병 선동 세력', '직업 시위꾼', '정치 선동꾼' 등으로 싸잡아 부르며 '외부세력', '장외세력'이라 몰았다.

선거도 끝났으니 너희는 필요 없다? 유가족 내친 언론들

8월 19일, 유가족들의 뜻이 여전히 반영되지 않은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이 나왔고 유가족들은 당연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조중동과 MBC, TV조선, 채널A 등은 유가족들을 향한 총공세를 시작했다.

언론들의 보도는 집요하면서도 악랄했다. 유가족들이 특별법 합의안을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는 전혀 보도하지 않으면서 일부 유가족들의 격앙된 모습만을 부각하거나 '일반인 유가족'들과의 분열을 조장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는 일은 '명백한 위헌'이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가 하면, 세월호 특별법을 '특례입학법'이라 부르기까지 하며 법안의 본질을 왜곡했다.

무엇보다도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은 목숨을 걸고 40일이 넘도록 단식을 이어 가고 있던 '유민 아빠' 김영오 씨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보도였다. '3류 찌라시'나 보도할 만한 '악성 루머'들을 언론이라 자처하는 무리들이 집단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데 나선 것이다. 8월 24일 채널A의 김영오 씨 '개인사 폭로'를 시작으로 〈조선〉와 〈동아〉, MBC와 TV조선이 뒤를 따르며 루머를 커다랗게 부풀렸다. 심지어 TV조선은 '유민 양'의 외할머니까지 수소문해 찾아가 질문을 퍼붓는 '스토커' 짓마저 자행했다.

8월 26일 TV조선 〈뉴스쇼판〉 보도 갈무리

이것이 언론인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 새누리당과 정부도 문제지만 진실을 향한 의지는커녕 왜곡과 은폐에 대한 의지만 보여주고 있는 언론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이다.

유가족들의 뜻인 '기소권과 수사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은 언제쯤 제정될 수 있을까. 설사 추석 연휴 전에 극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된다 해도 그간 언론들이 보여준 저열한 보도 태도를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듯 언론들의 태도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도 이렇게 묻는 것을 멈춰선 안 된다. 과연, 이것이 언론인가?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 복원 결과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세월호와 국정원이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한겨레〉와 JTBC 이외 신문과 방송들은 이 사안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1 (1 간단언급)	0	2 (2 한줄언급)	2 (1 간단언급)	4 (2 간단언급)

방송	KBS	MBC	SBS	YTN	JTBC	TV조선	채널A
	0	0	1	0	4	0	0

▲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에 대한 신문과 방송 보도량 (7월 25일~8월 30일)

방송사	KBS	MBC	SBS	YTN	JTBC	TV조선	채널A
보도량	–	–	1	–	2	–	–

보도목록	
SBS	〈국정원, 세월호 관리에 개입 의혹" …논란 확산〉 (27일, 7번째. 안정식 기자)
JTBC	〈대책위 "국정원, 세월호 운항관리 개입했다" 의혹 제기〉 (25일, 9번째, 이지은 기자)
	〈세월호 노트북에 '국정원 지적사항' …국정원-세월호 관계는?〉 (28일, 9번째, 강신후 기자)

▲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에 대한 방송사 메인뉴스 보도 (7월 25일~31일)

- 본 광고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재능기부로 제작되었습니다 / copy_박광식 art director_조문도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http://sewolho416.org/959 를 참고하세요!

저 둥근 달처럼
진실이 밝혀지는 날,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이들을 보내고 맞이하는 추석,
세월호 유가족들은 저 둥근 달을 보면서
무슨 소원을 빌까요?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기를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잘못은 덮고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그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특별법은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416 그날부터 지금까지 길 위에서 보내야 했던
세월호가족들의 수많은 눈물들...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진실이 저 둥근 달처럼 밝혀지는 날,
차디찬 바닷물 속에 잠들었던 아이들은
집으로, 고향으로, 부모님 품으로...

환하게 웃으며 돌아옵니다

| 후원 | 사람을 향한 나눔 〈사단법인〉 안산희망재단 세월호 지원 성금 및 나눔 문의 031-411-1984 www.ashf.or.kr 메일 ashope@naver.com
| 기획 |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www.sewolho416.org 메일 sewol416@gmail.com | 제작 | 세월호를 기억하는 경기시민들의 모임TFT 메일 savethekids@outlook.kr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마지막 실종자까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참사의 모든 아픔을 끝까지 함께 나누고,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으며,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전국의 8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세월호 참사 대응 범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입니다.

| 제작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sewolho416.org

facebook.com/sewolho416 **sewolho416**

● 후원계좌 | 국민은행 479001-01-248152 정현곤(세월호대책회의)

이 책자의 제작에 주제준, 조용신, 백가윤, 한선범, 박진, 이은정, 김혜진, 강풀, 민주언론시민연합, 안산희망재단, 김지혜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